

時論



柳錫春

시민운동 내부에서 현재의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이 경찰대학 특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지금까지 쌓아온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해치고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는 배신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市民아닌 權力 대변하고...

시민운동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권력이나 시장의 이윤 추구 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구성의 논

리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발상은 시민운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시민운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터였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차례로 집권하여 과거 민주화투쟁 당시의 동지들인 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권력의 실세로 포진시

監視者로서의 시민단체

키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민주화 이후 정·관계의 요직으로 진출한 운동권 인사의 비중은 아마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관계의 요직으로 진출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비중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생한 각종 권력형 비리에 시민운동이 과거와 같이 끈질긴 비판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이런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시민운동의 중립성과 치열함이 과거

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의 육사 출신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듯이, 요즘의 시민운동은 민주화된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관변화’는 특히 최근의 ‘언론개혁’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읽을 수 있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검찰 수사 과정을 일부 시민운동 단체들이 앞장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시민운동이 아니다.

정치 하려면 政黨 만들라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동’만으로는 도저히 한국사회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 부조리한 한국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정치집단, 즉 ‘정당’이라고 밝히야 한다. ‘무늬만 시민운동’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일 뿐이다.

‘시민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참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만 권력이고 지방정부는 권력이 아닌가. 풀뿌리 수준의 권력이 오히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는 더욱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각종 인·허가 등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권력의 단맛을 보려는 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개혁의 탈을 쓴 권력의 흥위병을 저지해야 하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수·사회학과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